

# 세계 곳곳 AI 법제화... 韓 '혁신성장-이용자 보호' 갈림길

美, 빅테크 기업 혁신 중점 규제  
EU, 워터마크 표시 등 위험성 대비  
韓, 연내 제정... 폭 넓은 이해 필요



미국이 AI 법 통과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실상 기술 혁신과 개발에 무게를 실는 반면, EU는 다년간 논의를 거쳐 촘촘하고 세세한 분류와 규제를 담은 AI 법을 정식 발효시켰다. /Chat GPT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미국과 EU 등에서 속속 AI 법이 입법, 발의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향후 AI 기술 발전과 활용의 기본이 될 기본법인 만큼 해외 사례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참고가 필요하다.

1일 <메트로경제>의 취재결과 미국에서는 AI 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 빅테크 기업의 혁신을 중점에 두고 규제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EU는 강력한 의무 규제 사항을 두고 이용자 보호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AI 개발 기업에 책임을 부과하는 AI 규제 법안 SB-1047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의회가 통과 시키고 서명 시한을 하루 앞

둔 시점이었다. 해당 법안은 1억 달러 이상이 투입된 거대언어모델(LLM)에 대해 안전성 테스트를 의무화 하고 다수의 사망이나 5억 달러 이상 재산 피해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주 법무장관의 기업에 대한 소송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 내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주요 빅테크 기업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뉴섬 주지사가 밝힌 '모델이 위험한 상황에 사용

되는지 여부'는 당장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오픈AI, 앤스로픽, 구글, 메타, MS,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본사와 사무소를 두고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 되면 사실상 주요 빅테크 기업 전부를 아울러 규제를 행사할 수 있었다. 이들 기업은 이번 법안에 대해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미국이 AI 법을 통과 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달리 EU는 일사천리 법

안을 입법해 정식 발효까지 마쳤다. EU는 '유럽연합 AI 법(EU AI Acts)'를 지난 8월 1일 정식 발효하고 오는 2027년까지 세부내용을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U의 AI 기본법은 위험도에 따라 금지된 ▲AI 업무 유형 ▲고위험 AI 시스템 유형 ▲제한된 AI 시스템 등으로 분류한 뒤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한다. 고위험 AI로 분류 될 경우 AI 공급자 등은 위험·품질관리체계, 기술문서 작성, 학습데이터 상세요약서 작성 및 제공 등 일정 문서 작성 및 보관, 유럽 적합성 CE 표시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는 AI 시스템도 워터마크 표시, 일정 사실 고지, 기술문서 작성, 학습데이터 상세요약서 작성 및 제공 등 요건을 준수하도록 세밀하게 규제한다. 만약 어긋시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법 위반시 1500만 유로(223억 원) 또는 전세계 매출의 3%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이처럼 EU의 AI 법은 정교한 AI 유형의 정의와 위험성 요건 및 필요 조치를 모두 담고 AI 발전에 따른 위험성에 대비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은 현재 지지부

진한 상태였으나 지난달 25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에서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히며 급물살을 타게 됐다. AI 기본법은 앞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나름 진척이 있었으나 21대 국회 회기 내 입법에 실패하면서 폐기됐다. 위원회는 출범식에서 AI 컴퓨팅 인프라 제공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규모를 현재 우리가 보유한 규모의 15배인 2엑사플롭스(EF·1초에 100경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 능력) 이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AI 기본법에는 AI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AI를 악용한 가짜 뉴스나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출범식에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윤 대통령은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위해 산업 AI 전환, 사회 AI 전환, 그리고 공공 AI 전환을 주문했다"며 "AI의 발전과 안전·신뢰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AI 기본법이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1면 '은행, 대출 이자수익...'서 계속

## 김장철 '금배추' 전망... 유통업계, 예약판매 등 대책 마련

폭염, 태풍 등 기후에 따라 가격 영향  
업계 산지상황 촉각... 부담완화 총력

롯데마트 절임배추, 김장재료 예판  
이마트 '베타후레쉬 절임 배추' 판매  
홈플러스 농가계약 등 물량확보 나서



충북 음성군 소재 산마을농농조합 절임배추 공장에서 배추를 손질하고 있는 직원들. /롯데마트

올해 역대급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배춧값에 비상이 걸렸다. 오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 폭등이 예상되면서 국내 유통업계가 김장용 절임 배추 예약판매를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에 속력을 낸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서 판매하는 김장용 절임배추 가격은 20kg 한박스에 최저 3만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한 공급물량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인 전망도 나온다. 태풍, 폭염, 장마 등 기후 상황에 따라 가을 배추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절임배추 가격도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김장용 절임배추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산지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형마트 3사는 지난해처럼 배춧값 폭등을 예상하고 대안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롯데마트와 슈퍼 등은 1일부터 오는 6

일까지 절임 배추 및 김장재료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가격은 한 박스(20kg)에 약 3만원대다. 롯데마트와 슈퍼가 판매하는 배추는 '평창 절임 배추', '해남 절임 배추', '괴산 절임 배추', '김우성 생산자의 영월 절임 배추' 등이다.

롯데마트는 간편 김장 트렌드에 맞춰 기존에는 롯데 슈퍼에서만 판매하던 김치 양념소와 절임 알타리도 예약

판매한다.

이마트는 오는 25일부터 일주일간, 홈플러스는 이달 중순부터 절임 배추와 김장재료 사전 예약 판매를 각각 진행한다.

이마트는 일반 절임 배추의 경우 해남에 배추를 직접 재배하는 절임 공장을 설립했다. 또 업계 단독으로 판매하는 '베타후레쉬 절임 배추'는 흥천과 문경, 예산, 무안, 부안 등 농가와 계약 재배를 진행해 작년보다 재배 면적을 늘렸다.

홈플러스도 절임 배추 공급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농가 및 김치공장과 계약을 진행했다. 다만 올해 판매 물량과 가격은 현재까지 미정이다.

업계관계자는 "올해 11월부터 가을 배추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배추 가격 하락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료 값 대부분이 상승한 가운데 물가안정을 위한 대형마트와 정부의 속도감 있는 움직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 예금금리 年 3.5% 수준 가계 예대금리차 0.44%p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을 받으려 오는 고객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했다"며 "현재 금리 인상뿐 아니라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10월2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p) 인상한다. 아파트 외 연립, 다세대 주택 등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0.2%p, 오피스텔 담보대출 금리는 0.1%p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10월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p,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1~0.45%p 인상한다.

◆ 예금금리는 '뚝'...예대금리차 확대  
문제는 높아지는 대출금리와 달리 예금금리는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은행의 1년만기 예금금리는 연2.5~3.5%,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3.33~3.5%다. 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연 3.5%) 수준이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를 말하는 예대금리차는 더 확대됐다. 정책 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는 8월 기준 0.44%p로 전달(0.33%p)보다 0.11%p 높았다. 예금금리는 낮아지고 대출금리는 높아지면서 은행의 이자이익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낮추기 위해 대출금리를 높이고 있어 예대금리차 확대를 통한 이자이익은 당분간 증가할 것"이라며 "하지만 스트레스 DSR 2단계 등 정부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정상범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 美 반독점법 사태 확산... 에픽게임즈, 구글·삼성 소송 제기

에픽게임즈 "앱 스토어 사용 제한"  
삼성 "소비자가 선택... 문제없다"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이슈가 게임 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자사 플랫폼을 운영하는 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것.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삼성전자가 불공정 담합 행위를 통해 플랫폼 시장을 독점하고 앱 마켓의 공정한 유통 생태계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에픽게임즈의 주

장이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두 기업이 공모를 통해 삼성 디바이스 내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활용, 자사 앱 스토어를 제외한 제3의 앱 스토어 사용을 막는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쟁점이 되는 지점은 해당 기능의 기본값이다.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디바이스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을 당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의 기본값은 비활성화 상태였다. 그러나 에픽게임즈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4년 7월 업데이트를 통해 이 기능의 기본값을 활성화 상태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제3의 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려면 기기 설정을 변경해야 허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에픽게임즈는 자사 플랫폼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만큼, 두 기업의 행위가 불공정 담합 및 독점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삼성전자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기능은 보안, 개인정보보호, 사용자 관리라는 삼성 핵심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설계된 기능"이라며 "기능이 활성화됐더라도 사용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삼성전자 서비스 공지 사항에는 "구입 후 처음 전원을 켜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후 환경 설정 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나유리 기자 yul115@